

April 7, 2010

한국경제의 이행과정과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

곽승영과 이영선*

*곽승영: 미국 하워드대학(Howard University) 경제학과 교수 (e-mail: sungkwack@yahoo.com, skwack@howard.edu, 전화: 301 299-7678); 이영선: 한림대 총장 (e-mail: ysleeh@hallym.ac.kr).

본 논문은 2010년 3월 산업연구원에서 발간된 *KOREA'S PRODUCTION DATABASE, 1960-2007: Highlighting the Role of Human Capital and Trade Liberalization in the Change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Wage Inequality*의 제 7장을 발췌하고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이며 산업연구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하다.

1. 서언

향후 수십 년간 국제 환경은 경제발전에 유리할 것 같지 않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많은 국가들은 지금까지도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미국은 고용 없는 경제회복과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 세계는 일본이 경험한 바와 같이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는 과거와 같은 역동성을 잃고, 점증하는 재정 적자와 지속적인 고실업에 직면하고 있다.

외관상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국가 중의 하나이다. 점증하는 정부 채무와 높은 실업률은 세계 경제의 성장과 자유 무역을 견인하는 미국의 지도적 지위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국은 더욱 부강해진 경제력으로 지도 국가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위안(Yuan)화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상하이로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이 미국의 지도력 하에 있는 지금의 전세계에 대한 관점과 국제 질서를 수용할지는 의문이다.¹ 국제 질서에 관한 또 다른 관점은 향후 10여 년간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은 자유무역이 활발하던 기간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2005~2007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은 전에 비해 둔화되었다. 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 4.8%는 아시아의 다른 신흥공업국들-홍콩(6.6%), 싱가포르(7.5%), 대만(4.8%)-보다

¹ See Martin Jacques (2009) on China's worldview.

낮았다. 숙련(대졸) 노동자와 비숙련(비대졸)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1980년 이후 상당히 줄었으나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세계는 이제 자유 무역이 위협받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이 직면한 과제는 한편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국 경제를 변화시켜 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는 경제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성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의 둘째 절에서는 과거 한국 경제의 초기발전 이행과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절에서는 한국이 보다 선진화된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넷째 절에서는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이행을 완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 후 다섯째 절에서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2. 한국 경제의 이행과정

1960년 이전까지 한국은 농업에 기반한 폐쇄적인 경제였다. 1962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21달러에 불과했다.² 심각한 기아와 고용 문제는 국민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였고, 정부는 나아갈 방향을 잃고 상황을 개선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1961년 박정희 장군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게 된다. 그의 목표는 국가 경제를 구하고 국가 안보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의 시급한 목표는 한국을 가난과 분노, 절망에서 벗어나게

² See Cho (1994), Lee (2005), and Nam (1994).

하는 것이었다.

한국 경제의 발전은 국가의 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62년 정부가 제1차 5개년 개발 계획을 시작하면서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새 정부는 시골 지역을 재건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홍수 예방을 위한 댐 건설, 벌거벗은 언덕과 산에 대한 조림사업, 토지정리를 위한 중장비의 제공(새로운 토지에 대한 관개, 등급화, 개량 및 경작, 흩어져 있던 소작지들의 통합을 위한)과 같은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³ 정부는 또한 진입로를 내고 처음으로 마을에 전기를 공급했다. 농부들에게는 소를 이용한 쟁기 대신에 트랙터를 제공했으며,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에는 수로가 건설되었다. 부패는 거의 사라졌으며 일반 국민들의 지원은 열정적이었고 이들은 국가의 노고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72년 새 정부는 제3차 개발 계획을 시작하였는데 그 목표는 국가 방위를 강화하고 한국의 산업을 보다 기술집약적으로 만들기 위해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당시 사업가와 기술자들은 사회에서 덜 존경 받는 계층이었다. 산업은 이제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보유하게 되었고, 정부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실무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을 매우 많이 고용하였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중화학 공업을 운영하기 위해 재벌이라 불리는 거대한 규모의 기업 집합체를 동원했다.⁴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과 공무원들은 선별된 기업들에게 필요한

³ See Kim (1994), and Park (2006).

⁴ See Oh (2006), and Stern, Kim, Perkins, and Yoo (1995, chapters 1-3, 1-61).

지침과 조언을 제공했다. 낮은 금리 정책과 투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자본 집약적인 생산 방식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화학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가진 산업이다. 한국의 내수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국 시장이 산업 발전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거대 재벌 그룹들을 통해 국제 시장을 내다보는 수출 촉진 전략이 정부 발전 계획의 핵심이 되었다.⁵ 이러한 발전 계획은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가져왔다. 박정희 체재 하에서 정부의 계획은 그 이후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노선을 확고히 만들었다.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2007년에 \$20,220로 증가하였다. 한국은 불과 4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적적인 성장을 경험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분석가들은 한국의 이러한 경이적인 경제 성장의 이유를 무역을 통한 개방과 빠른 수출 성장 덕분이라는데 동의한다. 국가 개입에 의한 산업 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⁶ 다른 한편으로, 산업 정책은 투자에 대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⁷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궁극적으로 시장을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시장의 신호(signals)를 교정하는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은 자원의 이용에 있어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실제로 1962~1981년 사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것이 그 결과이다. 한국은 자유시장 방임주의의 정책을 택했다고 하더라도 빠른 성장을 달성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⁵ See Scitovsky (1986) for t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aiwan.

⁶ See Amsden (1989).

⁷ See Rodrik (1995).

그러나 자유시장 정책에 의해서 한국이 40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그런 변화를 달성할 수 있을 지를 확신할 수는 없다. 만일 정책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면 개입과 자유방임 정책간의 구별은 한국의 초기 발전 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았다.⁸ 한국민들은 자국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했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했다.⁹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요소이다. 첫째로, 세계 경제 환경과 자유 무역이 한국의 무역을 촉진시켰다. 미국은 소비에트 연방과 냉전을 치르고 있었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고자 했다. 새로운 기술들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다.

1959년 1월 2일에 소련은 우주 탐사선 루닉 1호를 발사했다. 루닉의 발사는 우주와 속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케플란(Kaplan, 2009)에 따르면 “1959년은 새로운 충격이 일상의 매듭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해이다. 그 해 인류는 우주에 발을 내딛고 인간의 삶에 대한 개념을 조감한 해이며 세계가 축소되는 동시에 세계 속에서 인간이 번영을 누리는데 필요한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 해이며, 외부인이 내부자로 변하는 해였다. ... 그 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가 등장했다.” 새로운 생각과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있었다.¹⁰ 새로운 기술을

⁸ See Harrison (2006) for the argument that culture determines the success of a society.

⁹ See Hong (1994, pp. 3-24).

¹⁰ Kaplan (2009)은 1959년에 등장해 후대의 정치와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건 29가지를 지적하고 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배우고 사용할 기회가 전 세계에 주어졌다. 한국은 1960년대에 세계 경제에 진입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하에 있던 한국은 그 기회를 이용했다. 한국은 “후발주자의 이득”을 누렸지만 아주 늦은 참가자는 아니었다. 많은 나라들은 기회를 잡지도 못했다.

두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재건을 위해 한국의 자원을 동원했다. 그가 추진한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은 그의 추진력과 결단력의 주목할 만한 사례들이다. 슈만(Schuman, 2009)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개별 국가들의 기적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서문에서 그는 아시아의 경제 기적을 낳은 실제 원인들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세계화를 위해 힘들지만 올바른 결단을 내린 아시아의 지도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싱가포르의 이관유, 대만의 장개석, 한국의 박정희, 중국의 덩 샤오핑, 인도의 만모한 싱,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이다. 또한 그는 한국의 경제적인 기적에서 그의 지도력이 기여한 역할을 강조한다. 박정희는 이렇게 썼다. “나는 가난과 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만 했다.” 그의 지도력은 정부 관료와 국민들이 한국을 “굶주림”이 없는 나라로 만드는데 힘을 모으게 만들었다.¹¹

세 번째로, 한국민들은 보다 높은 교육 수준과 실무 기술을 크게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 체계를 포함해 교육 기관의 확장을 추진했다. 인적 자원과 기술의 증가는 확대된 노동 투입 수요에 부응했다.

¹¹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논의는 Kim (1994) 참조.

3. 교육과 기술의 질적 성장이 선진경제로 이행하는 핵심

여기서는 어떻게 임금 불균형을 낮추는 동시에 한국 경제를 변모시켜 보다 선진화된 경제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최종적 목표를 갖는다. 그것은 일정수준의 경제 성장과 낮은 임금의 불균형이다. 한국은 또한 두 가지 중간 목표(무역에 대한 개방성과 기술의 공급)를 갖는다.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중간 목표를 적절히 조합한다면 그것은 기술 공급의 증가를 수반하는 무역에 대한 개방성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두 개의 등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체계를 살펴볼 수 있다.¹² 우리는 임금 불균형이 무역의 개방성에 의존하고, 투자가 무역의 개방성과 기술의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한다. 산출(output)은 노동의 투입과 수입의 개방성에 영향을 받는다. 수입의 개방성은 수입된 자본을 통해 무형의 기술과 유형의 기술을 제공한다. 1965~2007년 기간의 회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ln\left(\frac{W_s}{W_u}\right) = g - 0.35 \times \ln\left(\frac{L_s}{L_u}\right) + 0.56 \times OP_{XM}$$

$$\frac{\Delta GDP}{GDP_{-1}} = h + 0.42 \times \frac{\Delta L}{L_{-1}} + 101 \times OP_M$$

여기서 $\ln(W_s/W_u)$ 와 $\Delta GDP/GDP_{-1}$ 는 각각 임금 불균등과 GDP 성장률을

¹² 이 체계는 Kwack and Lee (2007)에서 얻었다.

나타낸다. $\Delta L/L_{-1}$, L_s , L_u 는 각각 총 노동 사용에 있어서의 증가율,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을 나타낸다. g 와 h 는 상수이며, OP 는 기타 변수들이다. 노동 투입의 증가율은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들의 투입 증가율에 대한 평균인데, 임금소득에서 그 둘이 가진 상대적인 점유율을 가중치로 사용했다. OP_{xm} 과 OP_m , 다시 말해 개방성의 증가는 성장과 임금의 불균형을 더욱 크게 만든다. 개방성의 증가가 낮은 임금 불균형의 증가는 기술 공급의 증가에 의해 상쇄되는 경향을 보인다.

3.1. 한국 내의 개방도 증대

한국은 경제를 점차 개방해왔다. 이제 자유 무역과 세계화의 촉진은 한국 자체에 있는 무역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제거하고, 상품의 내용을 투명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970년 초반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는 해당 제품이 한국의 노동자들에 의해 한국의 기술과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수출은 한국에 산출과 고용의 증가를 가져왔다. 여기에는 수출과 고용 간에 단순하고 직접적인 일대일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 한국의 거대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 기업은 중간 생산물과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조립함으로써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해외에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값싼 노동력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과 다른 나라들에 수출한다.

외국산 중간 생산물과 부품의 사용이 증가함으로써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수출은 예전만큼 국내의 산출량과 고용의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 무역을 통한 GDP 성장이 고용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낮아지고 있다. 고용 효과는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안정 모두에 있어 고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제 정책의 초점은 고용 증대와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에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은 외국의 다국적 회사들이 한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생산을 확장하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젊은이들이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을 시도하도록 각종 장려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발전으로 고용을 증대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대형 백화점과 재래시장이 각각 서브할 영역은 다르다. 재래시장과 동네 구멍가게들을 활성화시켜 저소득층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증대시키는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반면에 정부는 중소기업, 가계기업에 인적·기술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 체계를 지구촌 경제에 보다 적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에는 특히 외국 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법률의 수를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치로 낮추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업이 감당하고 있는 간접비용을 낮추고, 또한 서비스 산업의 고용에도 기여할 것이다.

3.2. 교육 질 증대

6세 이상 인구에 대한 한국의 조사에 기반해 볼 때 한국의 교육 성과는 교육기관과 졸업생의 수에서 높게 나타난다. 1958년 이전에는 인구의 1% 미만이 대학에 다녔다. 그 수치는 1985년에 5.7%로, 2007년에는 21.9%로 증가했다. 평균 학업 기간은 1957년에 6.3년에서 1985년에 9.3년으로, 2007년에는 11.5년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학업 기간이라는 면에서는 교육 성과에 커다란 진전이 있음을 나타내지만 교육의 질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한국 교육의 질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낮은 것으로 보인다. IMD(2008)에 따르면 25~34세의 한국인 중 전문대학과 대학의 학위를 가진 비율은 55개국 중 4위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교육은 질적인 면에서 전체에서 53위이다. 한국의 숙련 노동자 비율은 43위-미국(7위), 일본(6위), 중국(40위), 홍콩(12위), 싱가포르(8위)와 비교하여-이다. 순위를 매기기 위한 IMD가 사용한 자료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보고서는 한국 교육이 질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미래 노동 공급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1960년에 5.99%였던 출산율은 1990년에는 1.59%로 급격히 떨어졌고 2007년에는 1.25%로 또 다시 하락했다.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는 노동 가능 인구의 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노동 공급에서 그러한 감소는 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노동의 질적 수준의 상승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한국 교육의 질은 1970년대 세계에 보여준 상대적인 수준보다도 낮다. 이 수준은 아시아(중국과 인도)와 동유럽의 신흥 경제국들에도 못 미친다. 식민주의

시기 일본은 한국에 공공 교육 체계를 도입했다. 한국 정부가 1960년대 입학에 포함해 교육 체계를 확대할 때까지 한국 교육의 질은 한정되어 있었다. 그 이후로 고등학교와 대학의 졸업생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의 교육은 교육의 질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너무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도 모른다.

한국 대학 교육의 질이 낮은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한국 사회는 대학의 교수들이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했다. 한국의 대학들은 정부나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왔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교수들은 “정책 사업가들(policy entrepreneurs)”이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린스턴대학의 경제학 교수 폴 크루그먼(P. Krugman)은 이들을 자신의 분야에서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는 학자들과 구별하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정책 사업가들은 관심을 끄는 직함과 단순화한 생각들을 이용해 많은 권력자들을 설득해 자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끔 만든다.”¹³ 정부는 현행의 인센티브 체계를 개혁해서 연구대학의 교원들에게 급여 우대책을 제공하고 분위기를 쇄신해 이들이 훌륭한 연구 환경에서 심도 있는 교육과 연구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거나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으로 이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데 관심을 쏟는다는 면에서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한국은 오늘날 노벨상은 40~50년 전에 시작된 연구 기금에 기초해서 10~15년 전에 이루어진 학문적 업적에 수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노벨상 수상이 모든 한국민이 잘 알고 있는 입학시험 종류의 지식

¹³ See MacFarquhar (2010).

검증(test)이 아니라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노벨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에서 물리학과 기타 영역에서 “인류에 가장 커다란 혜택”을 가져온 이들에게 일련의 상을 제정하는데 자신의 돈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달리 말해 교육의 질에 있어서의 변화는 느리고 학문적 업적에 있어 국제적인 인정을 얻는 데에는 노고와 진지한 헌신이 필요하다.

평균적으로 볼 때 한국의 교육과 기술의 수준은 노동력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이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모방하는데 충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창성을 지닌 새로운 발상과 혁신을 키우고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발상과 기술을 만들어야만 하는 위치에 스스로를 놓아야 한다. 한국은 발상과 혁신의 문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국은 그러한 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보다 올바른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공립학교의 교원과 교수들에게 더 많은 급여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해 주고 교육이 입시 시험준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입시가 자동적으로 졸업을 보장하고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the road to top”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다 건실한 가정과 사회풍조를 구축해야 한다. 외국의 학자들이 형식적인 문서를 넘어 실제로 대학에서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체제를 채택해야 한다.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은 개인이 축적한 기술과 교육에 의존한다는 것을 거듭 지적하고 싶다.

4. 수준 높은 제도와 선진국으로 가는 지평

최근 들어 한국이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듣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학자나 발언자 중 누구도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어떤 사전에도 “선진국”이라는 용어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웹스터 사전(1968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Advance, Forward, Further, Promote: 이들 네 개의 동사는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돕는다는 의미이다.” “Advanced”는 시간 상으로 앞선, 일의 진행이나 생각과 관련해 다른 말 앞이나 뒤에 붙는다.

한 국가는 다양한 측면을 지닌 인간 조직체이다. 전 세계에서 일부 나라들은 도덕적 가치라는 기준에서 다른 나라들에 앞서 있다. 또한 어떤 나라들은 기술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발전해 있다. 어떤 국가가 가난하지만 도덕적으로 선진국일 수 있다. 어떤 국가는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도덕적으로 낙후된 나라일 수 있다. 모든 측면에서 선진국인 나라를 상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지칭할 때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상대적인 의미에서 그 나라의 발전을 언급하는 것이다. 한 나라를 물질적 풍요, 기술, 문화적 측면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한 나라는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문화적 또는 도덕적 측면에서 선진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경제적 발전은 아담 스미스(A. Smith, 1976)의 글에서 “삶의 모든 필수품과 편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시몬 쿠즈네츠(Kuznets, 1966)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1인당 혹은 노동자 1인당 생산물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증가와 동일시한다.” 경제 발전에는 물질적인 번영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공기 청정도, 환경, 건강 상태, 사회의 복지 체계와 같은 일련의 사회적 지표들에 의해 측정되는 비물질적인 서비스들을 포함한다.

인간은 집단을 이루어 생활한다. 문화는 가치, 믿음, 관습, 전통 등의 체계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집단을 하나로 묶어 주는데 기여한다. 노스와 토마스(North and Thomas, 1973)는 “제도(institutions)”라는 용어를 불확실성을 줄이고 집단의 결속을 형성하는데 드는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사회적 기반 설비”라고 본다. 따라서 제도는 문화와 연관된다. 제도와 문화가 집단 속의 개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제도는 집단이 행동하고 생산하는 방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제도는 경제적인 효율성과 가치, 집단이 추구하기로 결정하는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¹⁴

우리 경제학자가 다루는 영역에서 큰 논쟁거리 중 하나가 경제 발전의 원인에 대한 것이다. 왜 북미는 남미보다 부유한가? 왜 아프리카는 가난한 반면 유럽은 부유한가?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 “사과는 나무에서 먼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아이들은 부모를 닮기 마련이다).”¹⁵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부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제도와 문화는 생산적인 정책들과 행동을 키우고 국가가 발전하느냐 지체하느냐 하는 문제에 큰

¹⁴ See Eicher, Theo S. and Cecilia Garcia-Penalosa (2006).

¹⁵ See Duncan, Kalil, Mayer, Tepper, and Paynes, (2005).

¹⁶ There are costs to capitalism. See Barbera (2009).

영향을 미친다.

한 국가의 발전 여부는 물질적, 비물질적 복지 모두를 포괄한다. 쉽게 말해 시민이 행복하고 안락한 삶과 개인의 자유를 누릴 때, 그 국가는 발전한 것으로 정의된다. 우리의 의도와 관련해서 “제도(Institution)”는 정치 체제 등을 포함한 제도와 문화 모두를 지칭한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가 성장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초기 조건을 구성한다.¹⁷ 결국 제도는 한 국가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제도만으로 산출을 낳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요소의 축적(factor accumulation)을 통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 홀과 존스(Hall and Jones, 1999)에 따르면 요소 축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제도가 발휘하는 영향력은 절반 미만이고 나머지는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이다. M. 맥팔렌, H. 에디슨, N. 스페터포러(2003, pages 96~97)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쪽 끝에는 사회를 위한 게임의 규칙을 세우거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형식적, 비형식적 규제로 작용하는 제도의 개념이 있다. ... 다른 한 쪽 끝으로 가서 이러한 포괄적인 제도 개념에 보다 특정한 형태를 부여하면 특정한 조직체들, 절차적 장치들, 조절 체계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발견한 것은 제도가 GDP 성장에 강력하고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그 영향은 부분적으로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하는데 있어 제도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제도는 사회의 게임규칙과

¹⁷ See Knak and Keefer (1995).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형식적, 비형식적 통제를 확립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좋은” 제도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적 장려와 정책적인 체계를 확립한다. 따라서 좋은 제도는 보다 강력한 경제적 실행력에 기여한다.¹⁸

우리는 선진국들의 제도들이 가진 특성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우리는 10개국(일본,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미국)을 검토의 대상으로 선택했다. 아래의 표는 선택된 국가들과 그들의 1인당 실질 GDP(2007년과 2008년)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4개국을 골랐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유럽 국가를, 영국은 영연방을 대표한다. 이들 4개국은 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보다 선진화된 경제”로 분류되었다.

교섭 비용과 장려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들이 공유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 질서

이 국가들은 오랜 기간 자신들의 제도를 변함없이 유지한다. 이 제도들은 장기간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 제도는 법과 질서를 위한 핵심적인 기준이다. 정부 기관과 개인들 간의 모든 논쟁은 다양한 법정을 통해 처리되는데 법정의 결정은 증거와 법률에 기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적 절차는 논쟁의 비용을 최소로 줄이고 문서화된 기록의 보존을 강제한다.

¹⁸ See North (1991).

둘째, 정당

이 나라들은 두 개의 주요 정당을 가지고 있다. 정당은 이념과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려는 의도에 기반해 형성된다. 따라서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정당은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는 경제적 실행력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이다.

셋째, 신뢰성

이들 나라의 정부들은 정책과 통제를 통해 자신들의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장시간에 걸친 공적인 논의를 가졌다. 개인들은 자신들의 공약사항들의 기록을 보관한다. 만일 개인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존중 받지 못한다. 신뢰성을 통해 국가는 교섭 비용을 줄이게 된다.

넷째, 비교우위에 기반한 책임의 할당

원칙적으로 정부는 공공재와 사회적 간접자본을 관리한다. 그 핵심 임무는 법률, 국가안보, 교육, 보건, 사회적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은 국가안보와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다른 한편, 핀란드와 스웨덴은 사회복지와 국내 안전을 강조한다. 영국과 미국의 국제 사회에서 제한된 지도력은 원칙과 질서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두 나라는

자신들을 약소국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치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채택한다.

다섯째, 개인 주권과 공유

이들 네 나라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 불우한 개인이나 집단과 그들의 부를 나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그것을 타인과 공유한다. 그들 대다수는 법과 관습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며 강한 공동체 의식과 공정성을 가진다.

요약하면, 이들 네 나라의 정부와 개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공리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그들은 단기적인 사건에는 덜 민감하다. 긴 시간을 통한 일상적인 부침은 서로 상쇄될 것이다. 개인들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한다. 그들의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해준다.

이제 한국의 정부와 개인들의 행동은 이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수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눈 한국민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그들이 “바빠서” 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한 친구에게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을 같이 먹자고 말했을 때 그의 대답은 이랬다. “일단 알았다(I heard).” 그의 대답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내 해석은 이랬다. 그는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약속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그때 시간이 난다면 그는 나와 저녁을 먹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암시하는 것은 한국은 교섭과 정보 비용이 높은 나라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들의 결정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단기적인 행위가

역동적인 한국민의 행동이라고 불린다. 그러한 역동적인 행위의 궤도를 알 도리가 없으므로 그런 행위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고 행위의 신뢰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헌법을 여러 차례 개정했다. 한국 정부는 외국 국가에 대해 자신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다. 한국에서 부패는 매우 심했고 과거에 많은 정부나 기업의 고위 관계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다. 한국 사회는 법과 속임에 무관심할 정도로 행동하고 있는 사회라고 해도 과찬을 것 같다.

한국의 몇몇 지도자와 학자들은 한국이 곧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한국은 아직 선진 경제의 대열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솔직하게 말해 한국의 현재 제도(Institution)가 그러한 선진국의 위상에 필수적인 사회적, 정치적 발전을 가져올 단계는 아니다. 분명히 한국은 보다 수준 높은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제도들을 필요로 한다. 독립적인 사법부의 기능과 사법 책임의 측면에서의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 게다가 한국은 여전히 경제 발전 수준과 연관되는 부패 문제를 처리해야만 한다.

지난 40년에 걸쳐 재벌을 포함한 한국의 권력 엘리트는 높은 부동산 수익을 누리며 엄청난 부를 쌓았다.¹⁹ 이 집단의 일원으로 태어나면 그 아이는 동일한 과정을 통해 엘리트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한국은 점차 분열되었다. 자신의 집단이 가진 이익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권력 엘리트의 시간적 지평은 축소되어 왔다. 권력 엘리트와 함께 한국의 시간적 지평도 줄어들었다. 이제 한국의 지도자들은 1등을 하기 위해 흠뻑을 치려고만 한다. 보다 빠른 성과를 위해

¹⁹ See Ades and Tella (1999) for rents, competition, and corruption.

서두르면 우리는 세계에서 일류가 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말이다. 이러한 행위와 사고는 장기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하고 실패는 더욱 큰 대가를 요구한다. 실패가 사회의 중산층과 하위계층에 주는 피해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이 되려는 열망에 필요한 것은 정부와 개인이 장기적으로 사고하고, 법률 체계를 준수하며, 행위, 직업, 윤리, 도덕에 있어 받아들일 만한 표준을 따르는 일이다. 정부, 기업과 사회 기득권층은 법에 걸리지 않도록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상으로 법에 담긴 뜻과 정신에 맞게 행동하여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을 막고 있는 심각한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선진국”과 “보다 발전된 경제”가 되는 일은 금세기 한국 사회에 가장 커다란 도전을 제기한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에서 배워야 한다. 이 국가들은 국제 사회에서 가치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나라가 되었고, 보다 불우한 나라들을 돕는다. 특히 식량이 부족한 나라를 도와주고 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엄격한 규율과 열정을 보인다. 동시에 그들은 수준 높은 관대함과 사랑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다.

한국은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해야 한다. 사적 영역은 진정으로 경쟁적인 시장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혁신적인 영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전문성을 갖추고 높은 수준의 공공재와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해서 사적 영역을 위한 외부성(externality)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정책과 조치를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었다. 잦은 정책 변경은 종종 사적 영역에 혼란을 초래했다. 클락 메달 수상자이자 MIT의 경제학 교수인 다론

아셈모구루(Daron Acemoglu)에 따르면, “국가들은 아이들과는 달리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는다. 그들의 정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²⁰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정부와 사적 영역이 함께 협력해 보다 나은 삶을 창조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 정부가 그 창립자가 태어나기도 오래 전에 인터넷 기술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구글(Google)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구글(Google)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다.²¹ 이러한 산업 발전의 양식-공공 투자에 뒤이은 사적 산업의 성장-은 많은 세월 동안 뚜렷했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경제를 번영시키기 위해서 한국은 높은 수준의 제도를 발전시켜야만 한다. 건설하고 수준 높은 제도야말로 선진화된 국가 내부에서 정치 경제적 체제의 건전한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이다.

5. 결론

한국은 1960년 초기부터 현재 발전단계까지 이끌어온 단기적인 사고와 경영정책 궤도를 취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21세기 세계환경에 맞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정책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여야만 한국 사회의 장래는 밝게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현재의 궤도를 유지하면서 선진화하려고 하면 한국의 장래는 어둡게 될 수 밖에 없다. 과거

²⁰ See Acemoglu (2010,p.2).

²¹ See Fallows (2010).

가나와 브라질이 체험한 것과 같이 한국이 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현명한 나라는 바꾸어야 할 때 변화를 수용하는 나라인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제시한 제도의 질과 책임의 할당은 한국이 현재의 양극화를 이끄는 성장의 길에서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사과는 나무에서 먼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아이들은 부모를 닮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어. ...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다음 기회를 기다리자.” 사람은 습관을 떨쳐내기가, 특히 중독인 경우에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우리는 정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개혁과 변화는 기득권층과 권력 엘리트의 일부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변화는 현 궤도에서 새로운 궤도로 이행하는 과정 동안 정녕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새 궤도는 풍요로운 생활(simple but rich life)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위대한 유대 학자는 우리가 여러 차례 함께 떠올리게 될 두 단어를 말했다-다시 시도하라(Try again).”²² 계속해서 변화하도록 노력하면 변화가 올 것이다. 제도와 행위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도력을 요한다. 우리 모두는 한국민에게 믿음을 갖고 있다. 교육과 설득을 통해 한국민들은 진정으로 변할 수 있다. 한국민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민은 결속, 더불어 살아가며 성장하려는 열망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²² Cited from Albom (2009).

표 1: 1인당 실질 GDP (2007년과 2008년)

	2007	2008	Euro Area	More Advanced Economies
Korea	21245	18248		
Japan	37258	42169		x
Australia	42063	42352		
Canada	37262	37234	x	
Finland	42562	45923	x	
France	36175	38633	x	x
Germany	37370	40543	x	x
Italy	29971	31500	x	x
Sweden	44138	45040	x	
UK	43390	39976	x	x
USA	43943	43730		x

Raw data 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Figures are per capita real GDP in 2007 at the dollar of 2007.

The base year of GDP figures is 2008.

References

- Acemoglu, Daron, (2009), "What Makes a Nation Rich? One Economist's Big Answer," *Esquire*, November 19, 2009, <http://www.esquire.com/features/best-and-brightest-2009/world-poverty-map-1209>.
- Ades, Alberto, and Rafael Di Tella, (1999), "Rents, Competition, and Corrup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9, September 1999, 982-993.
- Albom, Mitch, (2009), *Have a Little Faith*, New York: Hyperion Books, 2009.
- Amsden, Alice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Breen, Michael, (2004), *The Koreans- Who They Are, What They Want, Where Their Future Lies, (Revised and Updated)*, New York: Thomas Dunne Books, St. Martin's Griffin, 2004.
- Cho, Soon, (1994), *The Dynamics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4.
- Duncan, Greg, A. Kalil, S.E. Mayer, R. Tepper, and M. R. Paynes, (2005), "The Apple does not Fall far from the Tree," in Samuel Bowels, H. Gintis, and M. O. Groves, ed, (2005), *Unequal Chances-Family Background and Economic Succes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Chapter 3.
- Economic Planning Board (Korea), (1982), *Economic Policy in the Years of Development- History of the 20 Years of Economic Planning Board* (in Korean),

Seoul: Sam Sung Printing Co, 1982.

Eicher, Theo S. and Cecilia Garcia-Penalosa, ed, *Institutions,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Cambridge: MIT Press, 2006.

Fallows, James, (2010), "How America Can Rise Again," *the Atlantic*, January/February 2010.

Hall, Robert E. and Charles I. Jones, (1999),"Why Do Some Countries Produce So Much More Output than Othe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 1999, 83-116.

Harrison, Lawrence E., (2006), *The Central Liberal Truth-How Politics Can Change a Culture and Save It from Itself*,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Hong, Wontack, (1994), *Trade and Growth-A Korean Perspective*, Seoul: Kudara International, 1994.

IMD (2008), *IMD International Competitive Yearbok*, Lausanne, Switzerland, 200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Jacques, Martin, (2009), *When China Rules the World: The End of the Western World and the Birth of a New Global Order*, New York: Penguin Press, 2009.

Kaplan, Fred, (2009), *1959: The Year Everything Changed*, Hoboken: John Wiley & Sons, Inc, 2009.

Kim, Chung-yum, (1994), *Policymking on the Front Lines-Memoirs of a Korean Practitioner, 1945-79*,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1994.

- Kim, Hung Gee, (1999), *Korean Economy-Stories from the 33 years of Economic Planning Board*, (in Korean), Seoul: Korean Daily Newspaper Co., 1999.
- Kim, Kyung Dong, (1994), "Reflections on the Non-Economic Factors in Korea's Development," in Kwack, Sung Yeung, ed, (1994), *The Korean Economy at Crossroad-Development Prospects, Liberalization, and South-North Economic Integration*, Westport: Praeger, 1994, 41-56.
- Knak, Stephens, and Philip Keefer, (1995),"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Country Tests Using Alternative Institutional Measures," *Economics and Politics*, 7, 3, 1995, 207-227.
- Kook, Myung Soo, (2008), "Korea's Employment Structure and IO Employment Effects," (in Korean), *Monthly Bulletin* of the Bank of Korea, December 2008, 114-138.
- Koopman, Robert, Zhi Wang, and Shang-jin Wei, (2008), "How much of Chinese Exports is Really Made in China? Assessing Domestic Value-Added When Processing is Pervasive," NBER Working Paper No. 14109, June 2008.
- Kuznets, Simon, (1966), *Modern Economic Growth; Rate, Structure, and Sprea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 Kwack, Sung Yeung, and Young Sun Lee, (2007), *Income Distribution of Korea in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rospects: Economic Growth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Korea Facing Globalization in a High-Tech Skill World*, Seoul: Korea

- Development Institute, 2007.
- Kwon, Tae Hyun, (2009), "Korea's Employment Structure and Employment Effects," (in Korean), *Monthly Bulletin* of the Bank of Korea, May 2009, 61-90.
- Lee, Dae-keun, et, (2005), *New Prospective on History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From Late Chosun Dynasty to 20th Century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n), Paju, Kyunggi-do: Namam Publishing House, 2005.
- MacFarlan, M., H. Edison, and N. Spatafora, (2003), "Growth and Institutions" in IMF's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03, 95-128.
- MacFarquhar, Larissa, (2010), "The Deflationist- How Paul Krugman Found Politics," *New Yorker*, January/February, 2010, <http://www.newyorker.com/reporting/2010/03/01>.
- Nam, Duck Woo, (1994), "Korea's Economic Takeoff in Retrospect," in Kwack, Sung Yeung, ed, (1994), *The Korean Economy at a Crossroad-Development Prospects, Liberalization, and South-North Economic Integration*, Westport: Praeger, 1994,3-19.
- North, Douglas, C. and Robert P. Thomas, (1973),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 North, Douglas,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s and Economic Perform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North, Douglas, C., (1991),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5, Winter

1991, 97-112.

Oh, Won Chul, (2006), *How Park Chung Hee Made Strong Korean Economy*, (in Korean), Seoul: Dong Sue Mun Wha Sa, 2006.

Park, Chung Hee, (2006), *Addresses to the Nation and Korean People*, (in Korean), Seoul: Dong Sue Mun Wha Sa, 2006.

Ravitch, Diane, (2010), *The Death and Life of the Great American System: How Testing and Choice are Undermining Education*.

Schuman, Michael, (2009), *The Miracle-The Epic Story of Asia's Quest for Wealth*,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2009.

Scitovsky, Tibor, (1986), "Economic development in Taiwan and South Korea, 1965-1981," in Lawrence J. Lau, ed, *Models of Development*, San Francisco: ICS Press, 1986, Chapter 3.

Smith, Adam,(19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general eds, R. H. Campbell, ed, Oxford: Clarendon Press, 1976.

Stern, Joseph J., Ji-hoon Kim, D.H. Perkins, and Jung-ho Yoo, (1995), *Industrialization and the State: The Korean Heavy and Chemical Industry Deriv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Rodrik, D, (1994)," Getting Interventions Right: How South Korea and Taiwan Grew Right," *Economic Policy*, April 1994, 55-107.